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킬러규제 혁파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혁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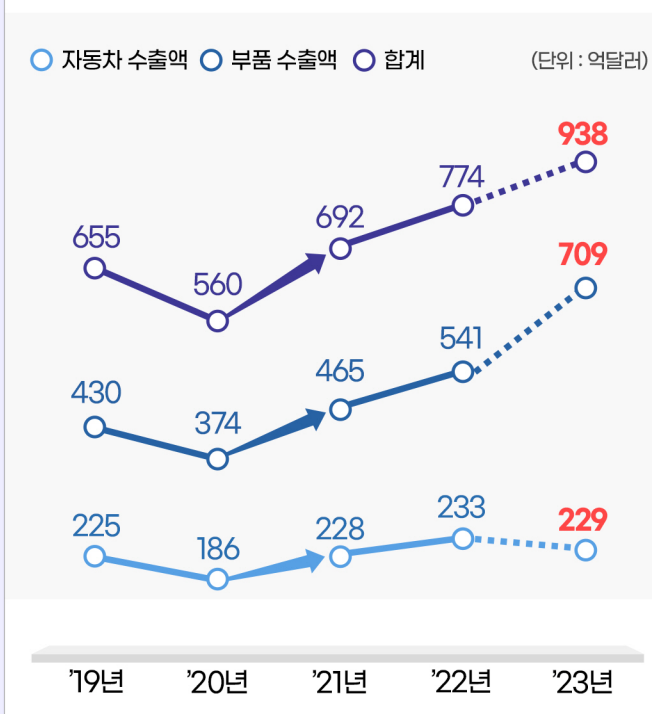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핵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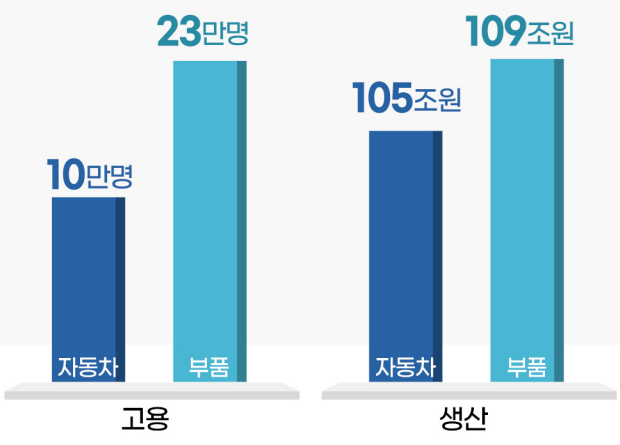
수출 1등 공신

- **'23년 수출이 사상 최초로 900억불 돌파**
- **무역흑자도 1위 기록(+711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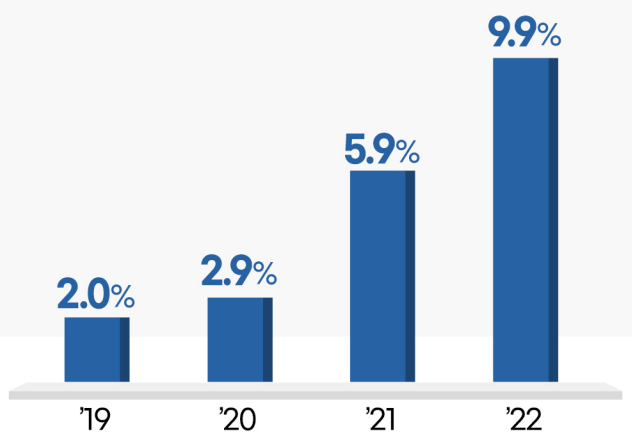
높은 국민 경제 기여도

- **고용은 33만명, 생산 214조원**
  * 부품 : 고용 23만명, 생산 109조원
- **1만여 개의 기업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
  * 부품기업 분포 : 동남권 27%, 충청권 25%, 수도권 23%, 대경권 20% 등



미래 산업을 이끌 Vehicle

- **배터리, 철강, 기계 등 전후방 효과 多**
  * 자동차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 중 1위
- **바퀴달린 스마트폰 (SDV)**
  * 모터, SW,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결집
- **전동화 및 친환경화 흐름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판매 가속화**



친환경 모빌리티 핵심 규제혁신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성능·안전 규정 개선, 투자인센티브 확대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 경감

화재 대응역량 강화, 정비생태계 조성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충전편의성 증진, 친환경차 전비 개선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43개 과제



1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19건

3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리스크 분담

1 미래차 전환 투자의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산업부, '24년)

- 기존 고용 유지만으로 연면적 증가 없는 시설전환투자 지원
- 보조금 한도 100억원 → 200억원 상향

2 미래차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산업부, '24년~)

-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
  * 대구 전기차, 광주 자율주행
- 단지별 전용사업 신설

3 임시투자세액공제 '24년까지 연장 (기재부, '24년)

통합투자 세액공제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	15	15	25	4→10
신성장·원천	3→6	6→10	12→18	3→10
일반투자	1→3	5→7	10→12	

6건 신비즈니스 창출 기반 조성

4 모빌리티 통합데이터 오픈 플랫폼 가동 (산업부, '24년~)

- 데이터 보유기업-수요기업간 거래 촉진

5 충전시설 보급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삭제 (산업부, '24년)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6 액화수소 탱크로리 비용 지원 (산업부, '24년)

- '24년 수소유통기반 구축사업 60억원 지원

7 특수자동차용 초소형전기차 허용 (국토부, ~'25년)

- 특수목적용 초소형전기차 기준 신설('24년)
- 안전기준 마련('25년)



8 초소형전기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경찰청, '25년)

- 시험운영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초소형전기차 도로 통행 허용 검토

9 연구개발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산업부, '24년)



6건 인증·평가 등 기업 부담 완화

10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 개선 (환경부, '24년~)

- 자동운전 시스템 구축으로 평가 대기시간 단축
- 기술수준에 맞춰 평가항목 개선 및 절차 간소화

11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간소화 (산업부·환경부, '24년~)

- 미·EU 등과 같이 OBD를 활용한 전압측정방식도 인정(직접 측정과 동일성 입증시)

12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평가 개선 (산업부·환경부, '24년~)

- 차량별로 상이한 히터 성능에 상관없이 객관적 주행거리 평가가 가능토록 개선

13 한국형 충전통신규약 (OCPP) 인증 개발 (산업부, '24년~)

- 내수용 제품의 신속 출시 및 인증비용 절감 지원

14 수소차 저장용기 인증기준 정비 (국토부, '24년)

-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UN 규정을 국내 여건에 맞춰 조화

15 수소가스 누출시험 개선 (국토부, '24년)

- 연료전지차 배출수소 농도 측정기준을 미국, EU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춰 개선

3건 친환경차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16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확산 (산업부·국토부, '24년)

- 친환경차 구매목표 실적 산출을 위한 등록정보 연계 (국토부)
- 목표 달성 우수기업 공시 및 포상 (산업부)

17 기계장비 수소충전 허용 (산업부, '24년)

- 수소 지게차, 트랙터 등 수소모빌리티를 고압가스 자동차 범위에 포함해 수소충전 허용

18 수소 충전설비 실내 설치 허용 (산업부, '25년)

- 적정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사업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19 미래차 투자·규제 합동개선반 가동 (산업부, '24년)

- 국가·지방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구성
-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전략회의 상정 → 규제개선, 적극행정 등 신속처리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43개 과제



2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12건

4건 화재 예방·대응 역량 강화

1 전기차 정기검사 내실화
(국토부, '24년)

- 고전압 배터리 등 검사기준 마련

2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소방청, '24년)

- 스프링쿨러 설비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 가이드라인 마련

3 지하주차공간 전기차 화재진압방식 개선
(소방청, '24년)

- 민관 공동 협업으로 효과적인 화재 진압 방안 도출

4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해수부, '24년)

- 소방설비 비치 의무화 검토 및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6건 안전관리 기준 현실화

5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플랫폼 구축
(산업부, ~'25년)

- 실시간 충전시설 안전관리로 사고예방 및 신속 대응 기반 마련

6 전기차 충전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 의무화
(산업부, '26년)

- 충전시설 신규 보급시 디지털 안전관리 적용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7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
(산업부, '24년)

- 이동형 ESS·전기차 충전기를 관리 대상 포함

8 수소충전소-철도간 이격거리 완화
(산업부, '26년)

-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설치·검사기준 실증을 통해 적정 이격거리 산정
  *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중(~'26.1월)

9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요건 완화
(산업부, '24년)

- 옥탑계단실, 물탱크 등 부수시설 높이를 보호시설 높이 산정시 제외

10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신설 및 교육 제공·운영
(경찰청, '24년)



2건 미래차 정비 생태계 조성

11 전기차 정비 역량 강화
(국토부·고용부·환경부, '24년)

-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마련 및 자동차 정비자격증에 친환경차 정비 시험기준 신설 검토
- 친환경차 정비교육 확대

12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국토부, '24년)

- 정비업체 방문 없이도 OTA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43개 과제



3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12건

3건 전기차 비용 절감

1 전비기준 상향
(산업부, '24년)

- 개소세·취득세 혜택 적용받는 친환경차 전비 기준 상향
  * 기술개발 속도 고려해 단계적 상향('25년부터 적용)
- 대·중형 친환경차 기준마련으로 차종별 전비 차등화

2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시 주차요금 면제/할인 추진
(산업부·지자체, '24년)

- 지자체 조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3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
(산업부, '24년)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2건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거래 허용

4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거래 허용
(산업부, '24년)

-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전력거래 실증을 통해 제도 마련 추진
  * 규제샌드박스 승인('23.11월)

5 V2X 활용 촉진
(산업부, '24년)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력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구매하고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V2X 제도 도입
- 사업 추진 시 전력거래에 필요한 조건 규정

2건 수요밀착형 충전기 보급 확대

6 급속충전기 설치시 가중치 부여
(산업부, '24년)

-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시 가중치 부여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7 노후아파트 전력인프라 개선 우선 지원
(산업부, '24년)

- 충전 인프라 확충 진행 또는 계획중인 노후 아파트에 전력설비 개선 우선 지원
  *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선정평가표 개정('24.3월)

3건 충전기 사용·설치 기준 개선

8 충전방해행위 범위 확대
(산업부, '24년)

- 충전행위 없이 충전구역 점유시 방해행위로 단속
- PHEV 완속충전기 이용가능시간 축소 (14시간→7시간)
- 포괄적 방해행위 기준 신설

9 심야시간대 완속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허용 (산업부, '24년)

- 아파트 등 건물 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규정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개정

10 충전구역 표시기준 현실화
(산업부, '24년)

-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 부여



2건 보급 충전기 활용도 제고

11 충전공급 이후 '기본요금 + 점유수수료' 부과
(산업부·환경부, '24년~)

- 민간 충전사업자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과금 체계(안) 마련('24년)
- 공공부문 우선 도입('24년) →민간사업자까지 확대('25년~)

12 보급 충전시설 관리 강화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환경부, '24년~)

-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등 실태조사 결과 반영('24년)
- 충전기와 전기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26년)